

시민 주도 '전주에너지전환마을' 지원

전주시에너지센터, 23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총 3개소 선정 예정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절약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전환마을이 전주에 들어선다.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과 생산 등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에너지전환 공동체인 '전주에너지전환마을'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센터는 △단독주택형 △공동주택형 △공동체형 등 각 유형별로 1곳씩 총 3곳을 선정, 시민들이 주도해 마을의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독주택형의 경우 1km 이내의 생활권을 공유하며 2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형은 동일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5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이면 가능하다. 또, 공동체형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30가구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선정된 에너지전환마을에는 △마을의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마을에너지전환 활동가 양성 △마을 에너지전환 추진 사업비(마을별 800만원~2000만원)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각 마을에서는 마을의 특

색에 맞는 에너지절약 활동과 주민 교육 및 선진지역 탐방, 단열 및 고효율 기기 교체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탄소중립 실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시민주도의 에너지자립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에너지전환마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너지전환마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에너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905-4105)로 문의하면 된다. /김국기 기자

2023 전주에너지전환마을 지원사업

오염물질 감축사업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1개소, 총 3개소
 지원대상: 마을 또는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전환 활동 추진 및 사업예산 지원
 활동내용: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단열벽 및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단독주택형, 공동주택형, 공동체형

지원내용: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마을에너지전환 활동가 양성, 마을 에너지전환 추진 사업비(마을별 800만원~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6월 13일(화) ~ 6월 23일(금)

신청처: 전주시에너지센터(063-905-4105)



지난 10일 희망의샘 안전봉사대는 초여름 더위 극복과 기력회복을 위하여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여름 보양식 삼계탕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복UP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가정 등에 전달

지난 10일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춘열)는 초여름 더위 극복과 기력회복을 위하여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여름 보양식 삼계탕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회원과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서노송동 경로당 어르신들과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가정과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 등 27개소에 삼계탕 150인분을 준비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그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이다. 희망의샘 안전봉사대는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2011년부터 해오던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급식 나눔을 2022년부터는 반찬 나눔과 김장김치, 이불 나눔 등으로 변경하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김순덕 회장은 "4월 반찬 나눔에 이어 이번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봉사단과 함께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그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소규모 아동 보호시설이다. 희망의샘 안전봉사대는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2011년부터 해오던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급식 나눔을 2022년부터는 반찬 나눔과 김장김치, 이불 나눔 등으로 변경하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김순덕 회장은 "4월 반찬 나눔에 이어 이번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봉사단과 함께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그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김국기 기자

전주시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즉각 철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0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문의 의원(호자2·3·4등) 등 34명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혁신'을 사명으



전주시의회가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즉각 철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 노력을 촉구했다.

로 하는 기구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IAEA의 최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처사와 다를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탄과 일본 자국민

의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독극물 테러"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주변국이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국기 기자

전주지역 봉사단체 디딤돌, 성금 300만원 기부

전주지역 봉사단체인 디딤돌(회장 성기봉)은 12일 전주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디딤돌'은 전주시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상호 간 우의를 증진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창립된 전주시 봉사단체다. 디딤돌 회원들은 현재 다양한 봉사나 나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국기 기자

성기봉 디딤돌 회장은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유용하게 잘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디딤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국기 기자



전주지역 봉사단체인 디딤돌은 12일 전주시청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시,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실시

전주시는 12일부터 약 한 달 간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계를 대어 또는 판매하거나, 정비 및 해체·재활용하는 116개 사업자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의무 위반과 미등록사업자, 불법 정비 등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첫째, 대여업의 주계약 및 사무실 보유 계약서 작성 여부, 둘째, 매매업의 예치 증서 또는 보증보험 확보 여부, 셋째,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넷째,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정비 확보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거나 현장에서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위중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우영영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뿐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